

국민의당 호남의원 23명 중 20명 “통합 반대”

〈지역구〉

광주일보, 호남지역 국회의원 ‘바른정당과 통합’ 찬반 조사

90%가 “정체성 안 맞아”…安대표 통합 추진 제동 걸릴 듯

호남지역 국민의당 국회의원 23명(광주 8명, 전남 8명, 전북 7명) 가운데 20명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명(권은희)은 유보, 2명(김관영·송기석)은 조건부 찬성 의사를 보였다. 또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했지만 선거 연대는 아직 결정할 시기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3면〉

28일 광주일보가 호남지역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전체 의원의 90%에 달하는 20명이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북의 김관영 의원은 바른정당의 자유한국당과 통합 논의의 중단을, 송기석 의원은 당내 합의를 전제로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바른정당과의 통합 및 선거연대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권은희 의원은 최근 통합에 부정적인 호남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듯, 유보로 돌아섰다.

호남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이 강고한 반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주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도 과반 이상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 입장을 것으로 알려져 당의 중심인 원내 동의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무리한 통합 추진은 당내 갈등을 확산시켜 분당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당을 살리려는 당을 ‘말아먹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에 대해서는 강성 통합 반대파인 광주의 전정배 의원, 전북의 이용호 의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호남 의원들이 정책연대의 성과와 내년 지방선거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거리를 뒀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는 정책연대의 성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정책연대에서 바른정당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등 각종 개혁 입법에 힘을 보태고, 반문(반문재인) 연대가 아닌 지역구도 탈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민의당 호남지역구 의원 23명 바른정당과 통합 찬·반 여부

지역	의원	조건부 찬성	반대	유보
광주	장병완	○		
	박은희	○		
	송기석	○		
	전정배	○		
	김경진	○		
	최경환	○		
	김동철	○		
	권은희		○	
전남	박지원	○		
	이용주	○		
	주승용	○		
	손금주	○		
	정인화	○		
	황주홍	○		
	윤영일	○		
	박준영	○		
	김광수	○		
	정동영	○		
전북	김관영	○		
	조배숙	○		
	유성엽	○		
	이용호	○		
	김종희	○		

피를 통한 민생과 미래를 담보하는 제3의 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연대 구도로는 호남 민심은 물론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 대표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당원 투표를 통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턱 없는 소리’라는 것이 호남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의 전반적인 반응이었다. 전당원 투표는 의사를 묻는 방법이지 통합을 결정하는 의결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철수 대표가 무리하게 바른정당과 통합을 서두르기보다는 정책연대를 통한 성과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당의 결집을 도모, 선거연대 등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꿈꾸는 자여, 창업을 두드려라”

28일 광주대 대강당에서 ‘꿈꾸는 자여, 창업을 두드려라’를 주제로 열린 ‘2017 청년창업 한마당’ 행사에서 참여학생들이 개막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선 광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창업자와 창업동아리가 1년간 활동한 결과를 전시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월호 수습본부장 민간인에 맡기고 수색 재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의혹에 휘말린 해양수산부가 은폐를 주도한 이철조 현장 수습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유골발견 2차 조사 결과 및 후속대책 기본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 류재형 감사관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

해수부, 조직 개편 추진

유골 은폐 책임자 징계 요구

단행한다.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기준 부서인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각각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가칭)로 개편한다.

해수부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추진하는 세월호 선체 직립(直立)이 완료되면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지난 17일 세월호 객실 지장물에서 발견된 유골은 기준 수습자인 이영숙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간공원 일몰제 심사
하루 앞두고 전격 보류
광주시, 시민단체 요구 수용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 심사가 29일로 예정된 심사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보류됐다.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평가단 구성과 관련 제기한 문제점을 광주시가 수용하면서 심사 일정이 늦춰졌다.

광주시는 28일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민평가단 구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실·과 공무원 등과 직접 간담회를 주재해 심사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 13명, 시민단체와 민간 공원 주변 주민자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민평가단 10명을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비계량평가(35점)는 전문가 평가 30점과 시민평가 5점으로 구성되고, 평가된 점수와 계량평가(70점)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시민평가단의 규모가 너무 적고, 공모가 아닌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평가단을 40~50명 단위로 구성, 추첨과 공모를 혼합해 폭넓은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기존 공고 취소, 심사위원회 및 시민평가단 재구성 등을 감안하면 1단계 송암·마륵·수랑·봉산공원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관이 지금까지 잘 논의해왔는데, 시민평가단 문제로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2단계 사업도 감안할 때 민관의 협의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 암매장 발굴 장소 확대 ▶6면



청년·‘문가네 양조장’ 형제 ▶18면

KIA 내야 백업요원 찾아라 ▶20면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G-100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 그 감동 스토리와 함께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

기간: 2018.03.09 ~ 03.18(10일간) 장소: 평창/강릉/정선



콜센터: 1544-4226

평창 동계패럴림픽 입장권 검색



2018

평창

동계

파

리

ل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ي

م

</